



즉시 사용

| | | |
|----|---|-------------------|
| 비고 | *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산업통상자원부 | |
| 담당 | <총괄>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| |
| | 전력 수급 |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|
| | |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|
| | 갑질 근절 |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|
| | 과장 서영석, 서기관 조상언 (044-200-2056, 2057) | |
| | 과장 이민영, 전문위원 신운섭 (044-200-2216, 2219) | |
| | 과장 최우석, 사무관 권용균 (044-203-5240, 5254) | |
| | 과장 최영진, 서기관 조영선 (02-3703-2011, 2012) | |

안정적 전력수급으로 국민의 쾌적한 여름을 돕겠습니다.

<여름철 전력수급 대책>

- ▶ 공급능력 역대 최고 1억71만KW, 전력예비율 14.1% 수준
- ▶ 전력수급 대책기간 운영(7.9~9.14), 폭염·발전기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

<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>

- ▶ 갑질 실태조사(5.1~31) 결과를 토대로 6단계 50개 과제 선정·추진
- ▶ 사전예방-피해신고-적발·감시-처벌·제재-보호·지원-민간확산 단계별 대책 추진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5일(목) 오전,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세종↔서울 영상회의)를 주재했습니다.

○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「여름철 전력수급 대책」과 「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」을 심의·확정했습니다.

* 참석 : 교육부·과기정통부·법무부·국방부·행안부·문체부·산업부·복지부·환경부·고용부·국토부 장관, 기재부·농식품부 차관, 방통위·금융위·권익위·원안위 위원장, 공정위 부위원장, 인사처·법제처장, 통계청장

◆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(산업부)

□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,241만kW(예비율 14.1%) 수준으로,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

○ 이는 올 여름 기상여건과 누진제 완화 등 전력수요 증가가 전망되지만, 원전정지 감소 등 공급능력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입니다.

* 피크시 원전정지 현황 : ('16冬) 7대 → ('17夏) 8대 → ('17冬) 10대 → ('18夏) 6대

<2018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>

| 구분 | 최대전력수요 (A) | 최대 공급능력 (B) | 최대전력수요시 예비력(B-A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'18년 | 8,830만kW (371만kW ↑) | 10,071만kW (572만kW ↑) | 1,241만kW (201만kW ↑) |
| '17년 | 8,459만kW | 9,499만kW | 1,040만kW |

□ (전력수급 안정대책) 정부는 폭염, 발전기 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7월9일부터 9월14일까지를 '전력수급 대책기간'으로 지정하고, 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.

○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추가자원 총 681만kW를 확보하고, 예비력 단계별 상황에 따라 수급 안정화에 적극 대응*하겠습니다.

* 수요감축요청(DR),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운전, 전압하향 조정 등

□ (에너지절약 대책)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국민참여형 절전운동을 통해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.

○ 공공부문의 경우 △실내온도(26℃~28℃) 준수 △조명 소등 △LED 조명 보급(80%이상) 등 에너지 절약에 솔선토록 하고,

○ 시민단체와 함께 절전 캠페인(7~9월)을 통해 스마트 절전요령* 등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한편, '문열고 냉방영업'도 계도하기로 했습니다.

* 에너지효율1등급 제품 사용, 고효율 LED조명 사용, 자가용 태양광 설치 등

◆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(국조실)

□ 정부는 공공분야 불공정한 갑질관행에 대한 실태조사('18.5)를 실시하고, 이를 토대로 단계별 추진과제(6단계 50개과제)를 선정했습니다.

□ 단계별 주요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(사전예방)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갑질 개념을 정립하고, 기존 법령상 갑질유발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.
 - ② (피해신고) △갑질 신고·지원 창구 확대 △익명 상담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안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, 신고자·피해자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.
 - ③ (적발·감시) 갑질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, △복무 감찰 △청렴도 평가 △갑질음부즈만 등 외부 감시도 확대하겠습니다.
 - ④ (처벌·제재)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행위자를 단호히 처벌*하고,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엄정히 묻도록 하겠습니다.
- * 중대 갑질범죄는 △구속·구형기준 상향 △징계기준 상향 및 감경사유 적용배제 등
- ⑤ (보호·지원) △법률·심리 상담 △소송 지원 △소송입증부담 완화 등 갑질 신고자·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,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(신원보호, 불이익 처분 금지 등).
 - ⑥ (민간확산) 민간의 갑질도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*하겠습니다.

* △직장내 괴롭힘 근절대책 수립 △보조금 지원 제한 △연기금 등 운용 기관의 주주권 행사 △불공정 거래 규제 △금융감독 강화 등

※ (붙임) 공공분야 갑질근절 과제(50개)

| 단계 (분야) | 과 제 명 | 소 관 | 조치시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사전 예방 (11) | <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·보급> | | |
| | ①갑질 개념 정립 | 권익위 | '18.10 |
| | ②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| 국조실 | '18.12 |
| | ③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게시·전파 | 전기관 | '19.1 |
| | <법령·제도상의 갑질 요인 제거> | | |
| | ④기관별 자체 점검·정비 | 전기관 | 즉시 |
| | ⑤법령 등 갑질 유발 요인 심사 강화 | 법제처·국조실 | 즉시 |
| | ⑥자치법규 모니터링 강화 | 권익위 | 즉시 |
| | <기관별 자체 근절 노력 강화> | | |
| | ⑦부문별·기관별 대책 수립·시행 | 전기관 | '18.3분기/ 연1회 |
| | ⑧갑질근절 대책 추진실적 등 보고 | 국조실 | 연1회 |
| ⑨갑질 예방 직장교육 의무화 | 권익위 | '18.10 | |
| ⑩갑질 자가점검 실시 | 전기관 | 매월 | |
| ⑪갑질 근절 실적 정부업무 평가 반영 | 국조실 등 | 매년 | |
| 피해 신고 (6) | <피해·신고 지원 창구 확대> | | |
| | ⑫범정부 갑질 신고센터 확대 운영 | 권익위 | '18.8 |
| | ⑬기관별 갑질 피해 신고·지원센터 신설 | 전기관 | '18.8 |
| | <익명 상담 플랫폼 운영> | | |
| | ⑭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시스템 운영방식 개선 | 권익위 | '18.9 |
| | ⑮카카오톡 연계 익명상담 시스템 구축 | 권익위 | '19.7 |
| | ⑯익명상담 제보 사이트 또는 시스템 구축 | 전기관 | '18.9 |
| <민간 신고창구 연계 > | | | |
| ⑰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| 권익위 | '18.8 | |
| 적발 · 감시 (7) | <내부 감찰 등 관리·감독 강화> | | |
| | ⑱전담 직원 지정·운영 | 전기관 | 즉시 |
| | ⑲기관별 실태조사 | 전기관 | 반기별 |
| | <외부기관 점검·감사 확대> | | |
| | ⑳복무실태 점검 강화 | 국조실 | 연1회 |
| | ㉑청렴도 하위기관 심층점검 | 권익위 | 연1회 |
| | ㉒지자체 갑질 실태 점검 | 행안부 | 연중 |
| | <민·관협력을 통한 견제·감시> | | |
| ㉓갑질 ombudsman 운영 | 기관 자율 | '18.8 | |
| ㉔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| 기관 자율 | 분기별 | |

| 단계 (분야) | 과 제 명 | 소 관 | 조치시한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처벌 · 제재 (9) | <적극적이고 엄정함 형사 처벌> | | |
| | 25 주기적 단속 실시 | 경찰청 | 즉시 |
| | 26 범죄 소지가 있는 신고·제보 적극적 수사 의뢰 | 전기관 | 즉시 |
| | 27 중대 갑질 범죄 구속·구형기준 상향 | 법무부·경찰청 | 즉시 |
| | 28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갑질 적극적 기소 및 구형 강화 | 법무부 | 즉시 |
| | <무관용 원칙의 단호한 징계> | | |
| | 29 징계수위 상향 | 인사처·행안부 | '18.12 |
| | 30 관리자·상급자 책임 문책 | 전기관 | 즉시 |
| | 31 징계감경사유 적용 배제 | 인사처·행안부 | '18.12 |
| | <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> | | |
| 32 관리자 보직 및 직무 배제 | 전기관 | 즉시 | |
| 33 승진 자격 검증 철저 | 전기관 | 즉시 | |
| 보호 · 지원 (8) | <2차피해 방지 등 보호 철저> | | |
| | 34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| 권익위 | '18.10 |
| | 35 2차피해 모니터링 및 구제 | 전기관 | 센터 개설 후 |
| | <내실 있는 피해회복 지원> | | |
| | 36 무료 법률 심리·상담 | 전기관 | 센터 개설 후 |
| | 37 무료 소송 지원 확대 | 법무부 | '18.8 |
| | 38 소송 입증 부담 완화 | 전기관 | 즉시 |
| | <행정적 지원 등 피해자 배려> | | |
| | 39 기관장의 보호 조치 | 전기관 | 즉시 |
| | 40 피해자 의견 진술권 보장 | 인사처 | '18.12 |
| 41 피드백 시스템 운영 | 전기관 | 연중 | |
| 민간 확산 (9) | <직장 괴롭힘 근절> | | |
| | 42 직장 괴롭힘 종합대책 수립 | 고용부·국조실 | '18.7 |
| | 43 특별법 제정 검토 | 고용부 | 중장기과제 |
| | <다양한 정책수단 활용> | | |
| | 44 재정지원 제한 | 기재부·행안부 | '18.12 |
| | 45 불공정 거래 근절 | 공정위·중기부 특허청·방통위 | '18.12 |
| | 46 금융감독 강화 | 금융위 | 연중 |
| | <사회적 인식 개선> | | |
| | 47 공익광고 송출 | 문체부·방통위 등 | '18.8~ |
| | 48 기관별 홍보계획 수립·시행 | 전기관 | 매년 |
| 49 민간의 갑질 근절 노력 지원 | 전기관 | 수시 | |
| 50 학교 내 갑질근절 교육 강화 | 교육부 | 연중 | |